 금융위원회	<h1>보 도 자 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산적 금융</li><li>• 신뢰받는 금융</li><li>• 포용적 금융</li></ul>
	보도	2018.7.26(목) 11시부터	배포	2018.7.26(목)	
책 임 자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02-2100-2610)		담 당 자	박 보 라 사무관 (02-2100-2613)	

**제 목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실시**

- ◆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등 새정부의 포용적 금융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은 현장에서 원만하게 안착된 것으로 평가**
- ◆ **1단계 서민금융 정책을 마무리하며, 이를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서민금융 정책은 '현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마련·추진**

## 1. 행사 개요

- '18.7.26(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대책들의 성과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이와 함께,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연계된 수혜자에게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을 실시하며, 종합상담의 중요성 강조

### <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7.26(목) 11:00~11:50, 서민금융진흥원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책 수혜자(5명), 현장 실무자(3명),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은행연합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금감원 부원장 등
- **주요 내용** : ① 일일 대출상담 및 맞춤형 대출 서비스 시연  
② 현장 간담회

## 2. 주요 서민금융 지원대책 점검결과 (※참고 1~5)

### 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17.7.26일 발표) 및 보완대책('18.1.11일 발표),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방안('17.12.19일 발표) 등

- '18.2.8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규모(2.3조원/月)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반면,
-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 등으로 24% 초과 대출은 원활하게 해소\*되고 있는 추세

\* '18.5월말 기준 24% 초과 차주 수는 '17년말 대비 171만명(△44.7%) 감소

### ②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추진('17.7.31일, 금융권 간담회)

- '18.상반기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총 30조원(310만명) 자율 소각
  - 장기연체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낙인효과 제거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 업권별 자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자율적 소각을 상시화

\* 은행권 '18.1월, 타 금융권 '18.3월부터 시행

### ③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17.11.29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거친 후 즉시 추심중단 또는 채무면제(총 55.7만명)
-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을 설립('18.2월)하여 '18.8월말까지 접수신청 예정
  - \* '18.2월말부터 7월초까지 총 3.1만명이 지원 신청
- 당초 '도덕적 해이' 우려와 달리, 다양한 연체자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지표\* 등은 큰 변동 없이 건전 신용질서 유지 중

\*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

('17.3월) 은행 0.26, 저축은행 5.2 → ('18.3월) 은행 0.25, 저축은행 4.5

### 3. 현장의 목소리

- 간담회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통한 채무감면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안전망 대출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등이 참석하여,
- 사업부도, 사고로 인한 장애 등으로 장기간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무자들이 채무면제 후 재기에 매진하고 있는 사례, 대부업체 대출을 정책 상품으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한 사례 등을 소개

#### <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서민금융 지원대책 이용자 사례 >

- '02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장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A씨(여, 51세)는 이후 치료·재활 과정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어 불법 추심에 시달려왔음
  -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통해 채무 잔여원금 940만원을 즉시 면제받고, 현재는 자활과 경제적 재기에 매진 중
- 대부업체 등을 통해 27.9% 고금리대출을 3천만원 넘게 이용 중인 B씨(남, 41세, 직장인)는 바뀌드림론도 거절당해 이자상환 부담이 심한 상황이었음
  - ⇒ 고금리채무 중 2천만원을 금리 21%의 안전망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부담 경감
- '17년 조명자재업체를 창업한 C씨(남, 39세, 자영업)는 대부업체에서 27%로 운영자금 15백만원을 대출받고 잦은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하락
  - ⇒ 금리 4.5%의 미소금융 운영자금 2천만원을 지원받아 대부업 대출을 대환하여 이자비용 연 340만원 절감하고 신용등급도 5등급으로 회복

-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실무자들은,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
- 참석자들은 진흥원, 신복위, 캠프 뿐만 아니라 복지부,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대출-자활 지원 등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
  - 뿐만 아니라, 대출 상담시에도 정책상품 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상품이 비교·안내되어 최적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진흥원과 금융회사간 협조도 더욱 활성화될 필요
- 또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홍보가 부족하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당부

#### 4.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별첨)

-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 최고금리 인하, 시효완성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조정 등의 1단계 조치들이 금융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 이제는 정책성 상품과 신복위의 시스템적 채무조정을 통해 이 조치들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 특히, 이러한 2단계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철저히 “수요자”와 “현장”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
  - 표준화·정형화된 상품을 밀어내는 식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의 세심함으로 수요자 제각각의 사연을 따뜻하게 보듬는 노력 필요
  -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정부도 그간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 취약계층의 수요를 더 듣고 더욱 깊이 있게 상담하며, 그 분들의 금융생활의 실제 개선여부를 측정하려는 노력 필요
- 마지막으로, 8월말까지 진행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홍보 당부

#### 5. 맞춤형 대출 서비스 시연 (※참고 6)

- 간담회에 앞서, 위원장은 중앙통합서민금융지원센터(6층)를 방문하여 “금융-복지 양방향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자체 복지상담에서 서민금융상담으로 연계된 고객에게 일일 “맞춤상담 서비스\*” 제공

\*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으로 ‘18.6.28일부터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 제공 (서민 금융/복지상담 신청자에게 필요시 지자체 복지서비스/진흥원 서민금융 상담서비스 연계)

\*\* 정책 상품, 민간 서민상품 중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대출을 추천하는 서비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a href="http://www.fsc.go.kr">http://www.fsc.go.kr</a>	금융위원회 대변인 <a href="mailto:prfsc@korea.kr">prfsc@korea.kr</a>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드립니다
--	---	--	---	---

◆ '18.2.8일 이후 현재까지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24%초과 대출은 원활하게 해소되는 추세

□ (신용공급 추이) '18.5월중 제2금융권·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9.8조원으로, 최고금리 인하 前 공급 수준 유지

○ 7~10등급 저신용자 대상 공급도 2.3조원으로 기존 추세 유지

< 가계신용대출 신규 공급규모(억원, %, 금감원 속보치) >

		'17.12월(A)	'18.2월	'18.3월	'18.5월(B)	증감(B-A)
저축	월중 공급액	4,580	4,964	6,235	6,811	2,231
	7~10등급자	945	898	1,108	1,141	196
여전	월중 공급액	75,134	79,588	86,696	86,563	11,429
	7~10등급자	19,347	18,738	20,494	19,757	410
대부	월중 공급액	4,785	4,613	5,178	4,843	58
	7~10등급자	2,332	2,392	2,462	2,533	201
계	월중 공급액	84,499	89,164	98,109	98,216	13,717
	7~10등급자	22,624	22,028	24,064	23,430	806

\* (저축) 시장점유율 89%인 15개사, (여전) 시장 전체, (대부업체) 시장점유율 64% 20개사

□ (24%초과대출 해소 동향) '18.5월말 시장 내 24% 초과 차주수는 '17년말 대비 44.7%\* 감소 (△171.0만명, 382.9만명 → 211.9만명)

\*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빠른 추세

< 24% 초과 신용대출 현황(조원, 만명, 금감원 속보치) >

		'17.12말(A)	'18.2말	'18.3말	'18.5말(B)	증감(B-A)	증감률(%)
저축	대출잔액	4.9	4.8	4.5	3.9	△1.0	△20.4%
	차주수	70.7	66.4	61.3	52.1	△18.6	△26.3%
여전	대출잔액	3.5	2.0	1.5	1.1	△2.4	△69.3%
	차주수	130.7	34.3	25.6	18.6	△112.1	△85.8%
대부	대출잔액	8.7	8.1	7.8	6.8	△1.9	△21.8%
	차주수	181.5	168.6	160.3	141.2	△40.3	△22.2%
계	대출잔액	17.2	15.1	13.8	11.9	△5.3	△31.0%
	차주수	382.9	269.2	247.2	211.9	△171.0	△44.7%

- 이는 금융권에서 기존 24% 초과 차주 중 126만명(3.0조원, ~6월말)에 대해 적극적인 금리 자율인하 조치를 실시한 영향

< 업권별 자율인하 실적(억원, 만명, '18.6월말 기준) >

	인하 금액(억원)	차주수(만명)
저축은행	874	2.5
여전사(카드사)	14,463	96.4
여전사(캐피탈사)	8,786	14.0
대부업	5,595	13.4
계	29,718	126.3

- (정책서민금융 대한 동향) 24%초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따라  
①햇살론 대환, ②바꿔드림론, ③안전망 대출 中 적합한 상품 지원

- \* ① (햇살론 대환) 20%이상 대출을 금리 10.5% 이내로 대환
- ② (바꿔드림론) 20%이상 대출을 금리 6.5%~10.5%로 대환
- ③ (안전망 대출) 24%이상 대출을 금리 12~24%로 대환

-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햇살론·바꿔드림론을 우선 안내·지원하고, 이들 상품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안전망 대출을 안내·지원 중
- '18.2.8~7.20일간 24%초과 차주 5,024명(699억원)이 정책 금융 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대환

< 정책서민금융의 24% 초과 대출자 전환 지원 추이(명, 백만원) >

구 분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금융권 연계*	안전망 대출	합 계
지원자 수	1,185	2,854	767	218	5,024
지원금액	13,290	43,659	9,598	3,361	69,908
지원금리 평균	8.3%	8.8%	14.4%	16.0%	-

\* 정책서민금융 지원요건에 미해당되었으나 금융권 대출상품으로 연계하여 지원

◆ '18년 상반기까지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 보유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총 30조원(총 310만명) 소각 완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생활안정에 기여

\*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채무가 부활하지 않으며, 채무부존재 증명(완제증명서)을 통해 금융거래 불편 해소

○ (금융공공기관\*) 총 21.7조원, 123.1만명의 채권 소각('17.8월)

\* 국민행복기금과 6개 금융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민간금융회사\*) 자율적으로 8조원, 177만명 정리('17.12월)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전부 포괄

< '17년말 기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실적 (단위 : 조원, 만명) >

구 분		합 계	
		금 액	인 원
공공	국민행복기금	5.6	73.1
	6개 금융공공기관	16.1	50.0
소 계 (A)		21.7	123.1
민간	은행·보험·대부업 등(B)	8.0	177.0
합 계 (A+B)		29.7	300.1

□ 이후에도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예방을 위한 금융권 자율의 가이드라인\* 마련·시행(은행권 '18.1월, 타 금융권 '18.3월)

\* 예) ① 시효 완성 전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상환능력 없으면 소멸시효 미연장  
②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효연장 제한

○ 이에 따라, '18년 이후 민간 금융권의 자율적 소각 상시화

☞ '18년 상반기 소각 실적은 총 2,349억원, 9.8만건

\* (은행) 404억원 0.7만건, (제2금융권) 1,945억원 9.1만건



- ◆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 55.7만명에 대해 채무면제 등 지원('18.6월)
- ◆ 국민행복기금 外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통해 지원신청 접수 중('18.2~8월)

□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채무 연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소득 및 재산, 금융자산, 신용카드 사용내역, 임차보증금, 출입국 내역 등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판단

①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무조정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9.4만명 (1.4조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추심을 중단한데 이어,

- 연대보증인 25.1만명에 대해서도 채무면제 조치('18.2월)

② 국민행복기금 외부 장기소액연체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을 설립('18.2월), 신청·접수 진행중

\*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행복기금 약정자

- 현재('18.7.9일 기준) 장기소액연체자 총 3.1만명이 지원 신청, 이 중 1.2만명\*은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면제 등 지원

\*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접수종료 후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매입·지원할 예정

□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대중매체(신문, 라디오 등)를 활용한 홍보 외에도 복지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원자 맞춤형 홍보 적극 진행 중

○ 8월말까지 지원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으로, 인근의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및 캠프 지역본부 등 방문 필요



- ◆ '17년 중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약 7조원(54.5만명) 공급하고, '18.5월까지 2.8조원(22.4만명) 공급

□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상품 제공

- 정책 서민자금 공급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년에는 연간 약 7조원(54.5만명) 공급

\* ('10년) 3.3 → ('12년) 3.7 → ('14년) 4.5 → ('16년) 5.1 → ('17년) 7.0

- 정책 서민금융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주요 지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지속 확충

\* ('16년) 36개 → ('18.5월) 43개 / 금년 말까지 46개까지 확충 예정

<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실적(만명, 억원) >

대출상품(출시연도)		지원현황		출시 이후 누계
		'17년	'18.5월	
미소금융('08)	건수	4.4	1.5	30.0
	금액	4,573	1,813	27,836
햇살론('10)	건수	28.6	11.2	159.5
	금액	33,463	11,486	153,033
바꿔드림론('08)	건수	0.5	0.3	24.1
	금액	763	474	26,794
새희망홀씨('10)	건수	21.0	9.4	144
	금액	29,991	14,475	161,513
총 계	건수	54.5	22.4	357.6
	금액	68,790	28,248	369,176

□ 그간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10년간) 및 한계를 점검하고

- 서민들의 금융여건 개선이라는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상품체계의 전반적인 개편 추진('18.6월부터 T/F 운영 중)

-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으로 채무감면이 확대되었으나 급격한 쏠림없이 공·사적 채무조정제도간 안정적 균형 유지

- (법원회생 현황) '18.6.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시행

\* 법 시행 전부터 13개 지방법원(제주 제외)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기시행

- 변제기간 단축시 채무 감면율이 상승 → 채무자에게는 신복위 채무조정보다는 법원 회생을 선택할 유인 증가

- (제도간 신청 현황) '18.5월까지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전년 동기비 8.3% 증가해 변제기간 단축효과가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

\* ('17.1~5월) 34,019명 → ('18.1~5월) 36,842명 (+8.3%)

-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인원도 유지되어 회생제도로의 쏠림은 미미

< 채무자구제제도 이용자 현황(천명, %)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7년 1~5월	'18년 (1~5월)
신복위		85.2	91.5	96.3	103.2	44.2	45.0
법원	개인회생	110.7	100	90.4	81.5	34.0	36.8
	개인파산	55.5	53.8	50.3	44.2	18.6	17.6
합계		251.4	245.3	237.0	228.9	96.8	99.4

- 제도간 취지와 장점이 달라 상호보완 효과\*가 있고, 신복위 차원의 자체적인 제도개선도 지속되어 온 데에 기인 추정

\* 사적 채무조정인 신복위제도는 법원회생이 어려운 경우#에도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고, 성실상환시 채무불이행 정보 해소에도 유리(신복위 2년 vs 회생 5년)

# (예) 소득이 불확실한 차주, 순자산이 있는 차주 등

※ '17.하 ~ '18.상반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주요 개선 사항

- 사전채무조정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감면폭 및 상환유예기간 확대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상환유예기간 확대
-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한계차주에 대한 담보권 실행 유예 등 시행

※ 노란색 음영 : 금일 일일상담시 시연되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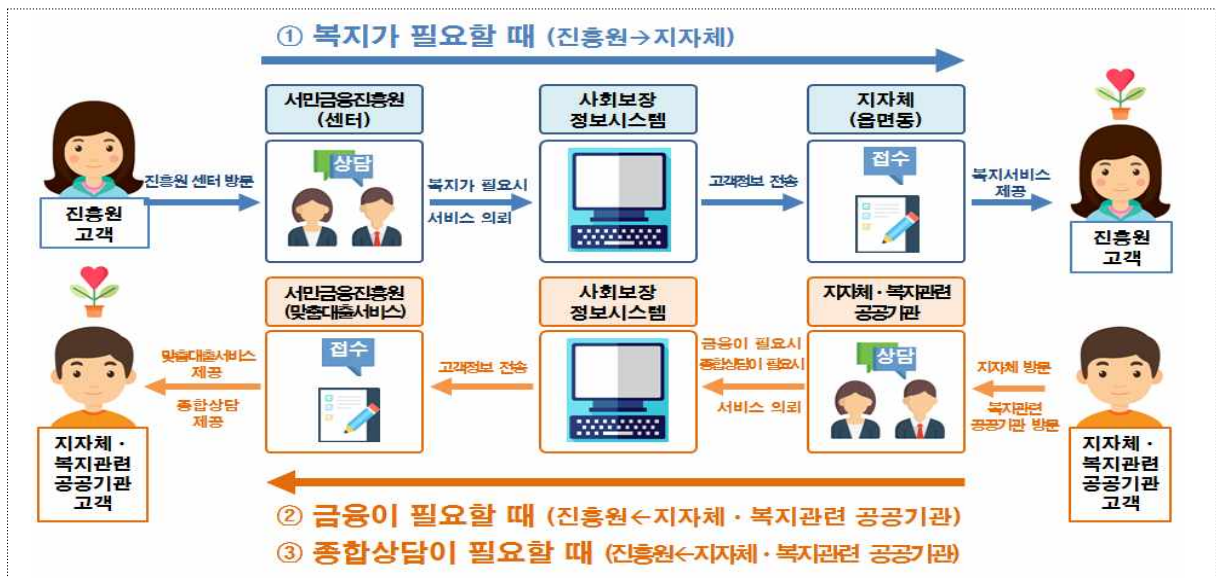
## ① 수요 발굴 확대 : 복지-금융 양방향 대출 서비스

- (개요) 지자체 복지공무원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한 취약 계층의 금융수요(대출·채무조정 등) 확인 시 진흥원으로 연계
- 반대로, 진흥원 직원은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저신용 차주 등에게 복지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자체로 연계

\*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전산연계 등을 거쳐 '18.6.28일부터 전면 시행

- (절차) ①지자체가 진흥원으로 서비스 의뢰 → ②진흥원은 상담 후 적합한 서비스 추천(대출·채무조정 등) → ③전산(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진흥원 兩기관간 처리경과 공유·관리

< 참고 : 복지·금융 양방향서비스의뢰 안내 흐름도 >



## ② 금융수요자 상황별 종합상담 : 맞춤형 대출 서비스

- (개요) 대출수요자의 소득·신용상황별로 정책금융상품·민간 대출상품\*별 한도·금리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안내 대상 상품) 56개 제휴 금융사가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사잇돌)과 해당회사의 자체신용대출

- (절차) ①방문자가 서비스 신청 → ②진흥원은 실시간 한도·금리 정보를 토대로 최적상품 안내 → ③방문자 선택·대출 실행